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中 협력 약속 보장 급선무”

광주·전남지역혁신협 엑스포 특위 회의 지적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 조건 중 하나로 여수보다 2년 먼저 상하이 2010 엑스포를 개최하는 중국의 협력 확보보장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엑스포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10년 먼저 행사를 마치게 되는 중국의 여수엑스포에 대한 협력 약속

명문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는 9일 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2012 여수엑스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한·중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보다 2년 빨리 엑스포를 개최하는 중국은 자국의 대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들이기 위

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행사 완료 후 여수엑스포에 대한 기여도는 미지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8월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상호 엑스포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천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상하이엑스포 성공을 위한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3월 이전까지는 중국 측의 여수엑스포

와의 교류에 대한 약속보장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교류 및 협력 확인 방안으로 전남도지사과 여수시장이 상하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조직 결성을 제안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상호 방문을 위한 민간조직을 구성하고 여수엑스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하는 실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철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장은 “중국보다 2년 늦게 열리는 여수엑스포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 광신대 '산학협력' 손 잡았다

광주일보와 광신대학교는 9일 오전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차녀시랑이이사람 운동' 공동 추진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유영삼 광신대 교학과장, 양희정 총무처장, 김진영 광주일보사 사장, 정규남 광신대 총장, 신항락 광주일보사 마케팅본부장, 조경완 편집국장, 정명연 광고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중 상하이차 경영 포기

중국 상하이차가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에서 결국 받을 뻔했다.

쌍용차는 9일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경영권 행사를 중지하게 되며 자금난에 처한 쌍용차를 지원하지 않고 경영을 법원에 맡기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또 통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매각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하이차는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철수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차는 지난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과 자본 48.9%를 인수하기로 분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천900억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자본율을 51.3%까지 늘렸다.

연환뉴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국내 병원 4월부터

오는 4월 중순부터 외국 환자들을 국내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

또 이번 달 중순부터 양방과 한방, 치과 의사가 협력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양의, 한의, 치의사 면허 가운데 2개 이상을 가진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9일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관련,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유치를 목표하는 외국인 환자 숫자를 지난해 2배인 8만 명으로 잡고 있다.

연환뉴스

민주 '상임위 각개전투' 대비하라

2월 임시국회 '입법투쟁' 총력 체제 돌입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의 2차 '입법투쟁'을 앞두고 상임위별 '각개전투'에 대비, 총력 체제에 들어갔다.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전투가 예고돼 있는 만큼 각 상임위의 전력을 극대화해 'MB악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상임위별로 얼마

나 잘 싸우느냐가 2차 입법투쟁의 관건"이라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저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전략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거여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의 파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별 기선제압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상임위 간사단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전략 강화를 각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뜨거운 감자"인 방송법과 관련, 한나라당의 2월 상정 시도를 막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 상정 시기를 애매하게 포함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지연작전에 나서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각 지역별 지역위원장 1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2차 입법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연환뉴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땀 1년 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

정부는 9일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 신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합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불금을 부당 수령, 신청한 경우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

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부당이득금 미납 시 최고 9% 가산금 부과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를 신설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농지정보,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청접수 기한을 2월에서 1월로 변경, 실정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촌지역 거주자에 직불금 우선 지급 ▲농업 이외 3천500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2005-2008년 1회이상 직불금 수령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 기존에 발표했던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강화 대책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간 협의조정 업무를 해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리실 사무차장과 각 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어 중요 사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연환뉴스

시 설

영산강 정비 지역업체 참여 당연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된 채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만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가 대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프로젝트를 반기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역업체가 참가하지 못한다면 4대강 프로젝트는 '속빈 강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4대강 프로젝트의 하나인 영산강 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조6천억원에 달해 '지역제한 대상 공사(50억원 미만)'나 '지역의 무공통 도급공사(74억원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월등한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턱기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경

우 수도권 업체들이 낙찰받은 뒤 공사 자체까지 수도권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영산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민원만 지자체가 맡아야 할 판이다. 4대강 살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민사상태에 빠진 지방건설업체를 더욱 옥죄릴 뿐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정부는 영산강 정비사업 공사 발주권을 영산강 지역 각 지자체에게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제한 대상 공사 확대, 지역의 무공통 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명분을 내세운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 코미디에 놀아난 한국사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정확한 예측으로 '온라인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미네르바는 경제전문가라는 일반의 예측과 달리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였다. 검찰은 그가 지난달 쓴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를 둘러싼 파동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불신과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전문가를 가장해 불쑥 내던진 말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동요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허약한 지적토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무능에 의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은 반

성을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혼란을 야기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야 한다. 검찰도 미네르바가 경제지식이 없는 30대 실업자라는 직업적인 부분에 매달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론은 미네르바 체포를 계기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 통과의 호기를 맞았다며 득의양양하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역기능은 이미 사회문제화됐고, 그에 따른 대응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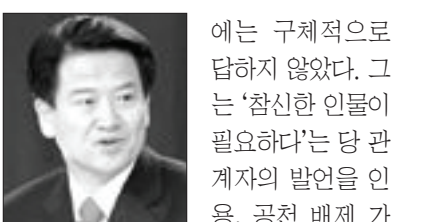
정동영씨 "당분간 귀국 계획 없다"

재보선 출마 답변은 유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4일 재보선과 맞물려 조기 복귀설이 도는 데 대해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뉴크대에서 연수 중인 정 전 장관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혼드는지 모르겠다"며 "역측과 낭설이 많은데 원래부터 귀국 계획은 정해놓은 게 없으며 선거에 지고 와서 총선도 하고 심신도 달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



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곧한 때에 가능성을 언급한 언

론보도에 대해서는 "(같은 당 사람들은) 식구다. 서로 애정을 갖고 화목해야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참 "레바논 동명부대 인원·장비 이상무"

포탄 발사 관련 설명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일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지역에 전날 박격포탄이 발사된 것과 관련, "동명부대의 인원과 장비에 대한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이스라엘 나하리야에서 레바논으로 발사한 박격포탄이 동명부대 주둔지에서 남쪽으로 16km 거리의 알부스탄 지역에 떨어졌다"며 "유엔평화유지

군(UNIFIL)은 해당 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중인 전 부대에 영의활동 자체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헤즈볼라로 추정되는 세력이 로켓포를 이스라엘로 잇따라 발사하자 대응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포격을 가했다.

이에 따라 동명부대는 '엘바'(엘로우) 수준이던 위협평가를 '레드'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영의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연환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90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의만평

- 김중두

씨알도 안먹히는 놈도 있다

지역 조합장들 단계적 비상임화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로

농협개혁위, 세부안 확정

농협중앙회장의 인사 권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임기(4년)도 한 번으로 제한된다. 또 직선제인 중앙회장 선거 방식은 간선제로 바뀐다. 지역 조합의 조합장들도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된다.

학계 및 농업계,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전무이사과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신용·농업경제·축산경제), 조합 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지금은 1천187명의 조합장 전원이 참여해 뽑는 직선제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257명)이 선출하게 된다.

지역 조합장들도 규모가 큰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된다.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별도로 경영을 책임질 상임이사를 위약한다는 의미여서 조합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상임이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된다.

정부는 농협개혁위의 제안을 검토한 뒤 2월 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